

중국의 수출 관련 정책 변화와 한·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

양 평 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(psyang@kiep.go.kr, Tel; 3460-1121)

주요 내용

-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불균형 시정,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,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, 과잉 생산구조의 개편,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보호 필요성,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수출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있음.
- 수출정책 수정의 목적은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두고 있으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,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(增值稅)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,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.

 - 중국정부가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(부가가치세) 환급률을 인하한 데 이어,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, 수출세를 인상하는 등 수출규제에 나섬.
- 한국의 경우 가공무역이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, 금번의 수출 관련 규제조치 강화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나, 향후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의 주의가 필요함.

 -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, 목제품, 비철금속, 석탄류 등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임.
- 2007년에는 중국의 수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섬유제품, 신발·피혁 제품 등으로 그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, 이 품목들에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
1. 최근 중국의 수출관련 제도 변화

-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불균형 시정,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,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국내의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, 과잉 생산구조의 개편,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원 보호 필요성 증대, 환경보호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수출정책을 수정하고 있음.
- 특히 2006년 들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,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(增值稅)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,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
가.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동향

- 중국의 가공무역은 개혁·개방 이후 중국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, 가공무역에 의한 무역흑자 확대가 통상마찰과 위안화 절상압력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- 특히 가공무역에 있어 ‘고부가가치화’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저부가가치형과 환경오염형 가공무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표 1. 2004년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조치 동향

일시	주요 조치
2004.11. 1	- 중고 기계·전자제품 및 폐기자재, 종자, 종묘, 종축, 화학비료, 사료, 첨가제, 항생제 등의 가공무역 금지
2005. 5.19	- 철광석, 선철, 폐강, 강정(鋼錠), 희토원광, 인광석 등 29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
2005. 8.22	- 산화알루미늄, 철합금광 등 11개 광산물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
2006. 1. 1	- 「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」 시행 *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,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 업종 등 산업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수출가공구 신규 진입 금지 - 생가죽, 농약원료, 원목과 펄프, 동정광, 아연정광, 주석정광 등의 가공무역 수입 금지
2006. 9.15	- 비금속광물, 에너지, 비철금속 및 스크랩, 세라믹 및 내화 제품, 캐시미어, 목탄, 침목, 코르크제품, 축전지, 일부 목재의 1차 가공품 등 191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을 폐지 및 가공무역 금지
2006.11.22	- 비금속광물, 목재 및 목제품, 무연탄, 갈탄, 코크스, 비철금속(동, 니켈, 알루미늄, 아연, 주석, 텅스텐, 마그네슘, 코발트) 등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

- 2006년 1월 1일에는 「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 잠정방법」을 시행하여 연해지역 수출가공구에 대해서는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,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 업종 등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였음.
- 11월 22일에는 비금속광물, 목재 및 목제품, 무연탄, 갈탄, 코크스, 비철금속(동, 니켈, 알루미늄, 아연, 주석, 텅스텐, 마그네슘, 코발트) 등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였음.

나.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(增值稅) 환급률 인하

- 중국은 수출 호조기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고, 수출 부진기에는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조절해왔음.
- 도입기(1985~93년) 및 100% 환급 → 환급률 인하기(1994~97년) → 인상기(1998~2003년) → 인하기 및 환급대상품목 축소(2004년 이후~현재)
 - ※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액이 1% 감소하면 중국의 수출은 0.23%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(1985~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추정).
- 특히 2004년 이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, 무역흑자 확대로 중·미간 통상마찰이 확대되고,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함.
- 수출 환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「수출화물 환급률 조정에 관한 통지」를 발표하여 환급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, 평균 환급률을 종전의 15.11%에서 12.11%로 인하함.
- 그러나 최근에는 △자원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△무역흑자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하고 △비효율·과당경쟁 업종을 도태시켜 산업 및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시경제 조정 차원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고 있음.
 - ※ 2006년 1월 1일 알루미늄 일부 품목, 원피 등에 대한 수출 환급을 취소하고, 일부 비철금속과 농약 등에 대한 환급률을 5%로 인하함.
 - ※ 2006년 9월 15일 중국정부는 수출에 대한 환급률의 취소 또는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일부 하이테크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음.

표 2. 9.15 환급률 조정의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품목	개정 전	개정 후
환급 취소 및 가공무역 금지 (191개)	수출입 세칙 제25장 중에서 소금과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금속류 품목 (석탄, 천연가스, 파라핀, 아스팔트, 규소, 비소, 石材, 비철금속 및 스크랩 등)	2%, 5% 11%, 13%	0%
	금속도기(cermet), 농약 및 중간체(25종), LEAD-ACID STORAGE BATTERY, 수은전지 등	5%, 13%	0%
	캐시미어, 목탄, 침목, 코르크제품, 일부 목재초급제품 등	5%, 13%	0%
환급률 인하 (1,130개)	강재(142개 세 번)	11%	8%
	도기(陶器), 일부 가죽 완제품, 시멘트, 유리	13%	8%, 11%
	일부 비철금속 재료	13%	5%, 8%, 11%
	섬유제품, 가구, 플라스틱, 라이터, 일부 목재제품	13%	11%
인상 품목 (255개)	非기계 구동차 및 부품	17%	13%
	중요 기술장비, 일부 IT 제품, 바이오 의약품 및 국가산업정책상 수출을 장려하는 첨단기술제품	13%	17%
	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	5%	11%, 13%

주: 増値税(부가가치세)는 통상 17%이며, 수출시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치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하나, 중국정부는 품목마다 환급률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.

자료: 「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조정과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의 추가에 관한 통지」 정리

다. 주요 자원과 철강제품에 수출세 부과

-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원자재 및 자원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자원, 에너지의 수출을 억제하고, 국내 내수판매를 우선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.
- 2006년 11월 1일부로 110개 수출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,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을 상향 조정함. 광산물, 에너지 제품, 비철금속제품, 합금강, 선철, 강편 등에 5~15%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강력한 수출규제에 나섬.

표 3. 수출세 부과대상품목

	대상 품목	종전세율	수출세	비고
광산물(44개)	인회석, 희토류 금속광, 金屬鑛砂 등	0%	10%	자원보호
에너지(4개)	석탄, 원유, 코크스 등	0%	5%	자원보호
비철금속(11개)	동, 니켈, 전해알루미늄 등	0, 2, 10%	15%	자원보호
희토류(15개)	희토류 화합물	0%	10%	자원보호
목제품(6개)	마루제품, 나무젓가락 등	0%	10%	자원보호
철강제품(30개)	철합금, 선철, 강편 등	0%, 5%	10%	통상마찰 회피 구조 조정

자료: 중국 상무부 사이트(www.mofcom.gov.cn)

2. 수출 관련 정책 전환의 배경과 향후 전망

가. 해외부문에 의한 국내 과잉 유동성 증가 축소

- 금리 인상과 지급준비율 인상만으로는 국내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, 중국정부가 수출의 조절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해외부문에 의한 유동성 증가압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음.
- 2006년 9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 대비 1,690억 달러 증가한 9,87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, 이는 곧 중국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.
 - ※ 1~9월 중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426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.5% 감소하였으며, 2003년 이후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투기성 자금(Hot money)도 2006년 6~9월 중에는 200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.
- 특히 중국내에서 가공무역이 중국내 부가가치는 낮은 반면, 무역 흑자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대됨.
- 2006년 1~9월 중 중국 가공무역의 무역수지 흑자는 1,288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(1,098억 달러)의 1.17배를 유지함.
 - ※ 가공무역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중 중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은 평균 52.0%(이 중 위탁가공은 25.3%)에 불과함.

표 4. 중국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

(단위: 억 달러)

연도	전체 수출입			가공무역 수출입		
	수출	수입	수지	수출	수입	수지
2004년	5,936	5,609	327	3,280	2,217	1,063
2005년	7,620	6,601	1,019	4,165	2,740	1,425
2006년 1~9월	6,912	5,814	1,098	3,625	2,337	1,288

자료: 『중국해관통계』

나. 통상마찰과 위안화 절상압력 예방

- 2006년 1~9월의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,098억 달러로, 2005년(1,019억 달러 흑자)의 연간 흑자규모를 이미 상회하는 등 무역흑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과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철강분야에서 출혈 수출에 의한 통상마찰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미국, EU 등과의 섬유 관련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섬유류(원사, 직물)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였음.

다. 수출구조 개편 및 에너지·자원·환경 보호

- 국내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출혈 수출이 무역마찰을 초래하면서 과잉 생산능력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중앙정부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.
- 국무원은 지난 2006년 3월 12일 「생산능력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」를 발표, 신규업체의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규모 기업의 정리·도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함.
-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광물자원, 에너지, 비철금속, 목재 등의 수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.
- 중국정부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경제성장패턴을 수정하기 위해 11.5계획에서 '자원절약형 사회'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, 2010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에 비해 20%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.
- 중국정부는 청정생산촉진법, 환경영향평가법, 제품생산자책임제도 등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해가는 추세임.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피혁, 염색가공, 목탄, 축전지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
라. 최근 수출정책 변화의 평가와 전망

- 금번 조치는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부분적인 축소에 기여할 것이나 근본적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대책이 될 수 없음.
- 2006년 1~9월 중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과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품목의 무역 흑자가 중국 전체 무역 흑자의 26%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 조치로 중국의 무역 흑자 축소에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수출 증치세의 인하 폭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발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※ 2006년 1~9월 중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의 무역흑자액은 43.4억 달러, 환급률 취소품목의 흑자는 19.5억 달러에 불과함.

-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의 수출규제조치는 국내 자원보호, 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

나, 향후에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통상마찰 예방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3. 한·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

가.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현재 한국의 경우 가공무역이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, 금번 가공무역 금지 대상품목이 한·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음. 따라서 금번 수출규제조치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.

-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의 2006년 1~9월 중 한·중교역액은 52.2억 달러로 한·중 교역액의 5.3%를 차지하고 있음(대중 수출의 8.1%, 대중 수입의 4.1% 차지).

※ 그러나 가공무역 수입을 금지한 품목의 2006년 1~9월 중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0억 6,700만 달러로, 중국의 전체 대한국 수입액의 1.6%를 차지하고 있음. 가공무역 비중(대중 수출의 53.9%)을 감안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중국 수출액은 6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아, 가공무역 규제가 확산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비중은 53.9%임(중국의 전체 수입 중 가공무역비중은 48.5%)(2006년 1~9월 기준).

표 5.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중국 수출입 및 한·중 교역 현황(2006년 1~9월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중국 전체 수출입(A)		대한국 수출입(B)		B/A(%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수입 금지	3,856	3,711	1,604	45	41.6	1.2
수출 금지	16,574	13,369	541	1,582	3.3	11.8
수출입 금지	6,911	5,780	429	1,022	6.2	17.7
소 계(C)	27,341	22,860	2,574	2,648	9.4	11.6
(C/D, %)	(4.0)	(3.9)	(8.1)	(4.1)	-	-
전 품목(D)	691,248	581,473	31,964	65,756	4.6	11.3

자료: 『중국해관통계』

- 그러나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경우, 관련 원부자재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2006년 1~9월 중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액은 114억 달러 규모(이중 인하품목이 104억 달러, 취소품목이 10억 달러)로 대중국 수출액의 22.4%를 차지하고 있음.

표 6. 수출 증치세 인하·취소 품목의 대중 수출 및 수입액(2006년 1~9월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	대중 수출액		대중 수입액	
		금 액	비중(%)	금 액	비중(%)
전 체		50,979	100.0	35,048	100.0
조정 품목	인하품목	10,416	20.4	4,448	12.7
	취소품목	991	2.0	2,093	6.0
	소 계	11,407	22.4	6,541	18.7

자료: 『중국해관통계』

나. 대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

-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의 경우 2006년 1~9월 중 해당 품목의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액은 9.7억 달러로, 중국의 대한민국 총수출액의 3.0%를 차지하고 있음.

※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56.3%가 가공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중국 수입액은 5.5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(인하 및 취소)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-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품목의 2006년 1~9월 중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65.4억 달러(이 중 인하품목이 44.5억 달러, 취소품목이 20.9억 달러)로 대중국 수입액의 18.7%를 차지함.

※ 금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품목의 평균 환급률은 2004년 평균 12.8%에서 2006년 9월 15일 이후에는 8.5%로 인하되고, 이 중 인하품목의 평균 증치세 환급률은 2004년 13%에서 10.2%로, 취소품목은 2004년 평균 11.9%에서 0%로 인하됨.

- 중국의 수출세 부과로 희토류, 목재, 석탄, 광산물 등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경우 대중국 수입 감소는 물론,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
- 11월 1일부로 중국이 수출세를 상향 조정한 제품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.

※ 주요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: 희토류 68.9%, 목제품 등 40.9%, 비철금속 18.6%, 석탄류 22.3%, 철강제품 21.3%

표 7. 수출 증치세 인하·취소 품목의 대중 수출 및 수입액(2006년1~9월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품 목	대세계 수입		대중국 수입		중국 비중(%)	
	2005년	2006년 1~9월	2005년	2006년 1~9월	2005년	2006년 1~9월
희 토 류	28.6	17.7	21.9	12.2	76.6	68.9
목 제 품	193	159	70	65	36.3	40.9
철 강 류	4,059	2,742	770	584	19.0	21.3
비철금속	4451	4,878	1,093	906	24.6	18.6
에 너 지	47,502	46,120	1,629	1,148	3.4	2.5
* 석탄류	4,896	3,583	1,277	799	26.1	22.3
광 산 물	4,497	4,487	448	292	10.0	6.5

자료: 한국무역협회 DB로부터 작성

다. 중국 진출 현지기업에 미치는 영향

- 수출 환급률 인화와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의 경우 수입 관세와 증치세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가공무역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임.
- 관련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므로 적어도 20% 이상의 원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, 사실상 가공무역 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.
- 특히 수출마진율이 낮은 섬유류(원사, 직물)의 경우 환급률이 소폭(2% 포인트) 인하되었어도 수출채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향후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 내수시장으로 전환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섬유 제조업체의 도산도 우려됨.
- 중국내 가구 제조업체, 비철금속(마그네슘, 알루미늄, 아연 등) 가공업체 등 중국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출한 기업의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됨.
- 중국의 환경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업종(피혁, 염색 등) 및 저부가가치형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중국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.
- 가공무역이 금지되어 있는 피혁(원피) 가공업체는 물론 중국내 피혁제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피혁의 수입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, 가공무역 금지 및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섬유와 신발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4. 시사점 및 대응방안

- 중국내의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루어 향후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인투자의 경우 중국 진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단순 임가공, 환경오염 업종,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투자지역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.
-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지역을 전환하거나,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제반비용이 저렴하고 우대정책 향유가 가능한 지역(중서부 등)으로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금번 조치를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 단 중국 기업 및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이 수출세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-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일반무역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, 가공도를 높여 非금지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함. 동시에 가공무역 수입금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현지법인의 원자재 조달 현지화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.
-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희토류, 비철금속, 석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 자원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중국의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, 비금속광물, 비철금속, 석탄 등 주요 자원 확보선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함.
- 중국의 거시경제정책, 산업구조조정정책, 환경정책, 자원보호정책 등 중국의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수출환급률 인하, 가공무역정책 변화로 중국내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에 대한 퇴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하여,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한국의 임가공 기업의 진출이 많은 산동성, 요녕성, 광둥성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·간접적인 로비를 통해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향후 섬유 및 신발 업종 등 추가적인 가공무역 금지 또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대상품목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.